

법은 정치(권력)의 근거요, 주권자의 강력한 무기다

-- 법률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법·정치·의식 조사에, 전국 45개 대학교 대학(원)생 1천3백32명 응답 --

-- 법의 날(4·25)과 유권자의 날(5·10)에, 청년·대학생들의 정치에 관한 생각을 묻다 --

- 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 동의 43.69%, 부동의 53.75%
 - ◆ ‘유엔의 대북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73.12%>
 - ◆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국방이 걱정된다’ 고 응답. <75.38%>
- ② 국회 동의 없는 임명 등 인사청문회제도는, 개혁해야 47.82%, 유지해야 44.07%
 - ◆ 국회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 49.02% 반대한다 46.10%
- ③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 59.98% 반대한다 34.08%
 -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독립)에 대해, 찬성한다 58.33%. 반대한다 37.76%
- ④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68.24%가 부정적. -- 여학생(72.95%)이 남학생(63.14%)보다 더 부정적 --
 - ◆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의 94.07% >
- ⑤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 84.91% (지난해 -78.53%-보다 훨씬)
 - ◆ ‘법원·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고 <응답자 92%>
 - ◆ ‘10억원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52.7%, -지난해는 51.66%>
- ⑥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검찰)가 나서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것’ 은 옳지 않다. <응답자의 66.82%>
 - ◆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로펌·변호사실 등에서 내용증명 받았거나 봤다, 22.82%
 - ◆ ‘정부의 https 접속차단정책의 악용(인터넷 검열, 정부비판 차단 등) 우려. <71.62%>
- ⑦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높다’ 고 생각한다. <57.21%>
 -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한다’ 에 <54.35%가 그렇다고 동의>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전국 45개 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1천3백3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17일간 “대면조사” 한 청년·대학생 법·정치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69 % P>

2. 조사결과, 청년·대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창업 등 장래에 대해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가 68.24%나 나왔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63.14%인 반면, 여학생은 72.95%로 여학생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한다”에 동의한다가 과반을 넘긴 54.35%나 되었다.

또한, 사법 관련해서도 10명중에 9명 이상은 “법원과 검찰의 재판이나 수사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84.91%가 동의했다.

2006년 저작권법(**비친고죄**) 개정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법과라치 피해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22.82%가 로펌·변호사실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거나(4.65% 포함)주변에서 봤다(18.17%)고 응답해, 저작권법 피해대상이 최소한 매년 150만명~800만명으로 추정, 법개정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한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94.07%로 압도적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2017년 봄 대통령 선거(5·9)에 드루킹 여론조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39.26%가 의혹에 수긍하는 입장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에 대해서 53.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소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59.98%)하는 의견이 반대(34.08%)보다 많았으며, ‘경찰의 독자수사권 부여(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찬성(58.33%)하는 의견이 반대(37.76%)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은 정치권력의 근거요 자유민의 강력한 무기임에도, 법이 그 기능을 상실한 듯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에 실질적인 법치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법(정치)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바, 유권자의 날(5/10)을 맞아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사법(수사·재판)기관을 국민이 선출해야하며, 사법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법과 정치의 실질적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4. 붙임 - 조사개요(3쪽) 대학(원)생 법정치 설문지 주요 분석(4쪽) 및 항목별 응답(11쪽)
-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 공지사항 참조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I. 조사개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8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서울시내 대학 중심(91.59%) 전국 45개 대학교의 청년·대학생의 법의식·인권상황, 정치인식, 사법개혁, 사회사현안 이슈 및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관련 대면 방식으로 1,332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7일(금)부터 5월 3일(금)까지 17일 동안 29개 문항(10개 예/아니오 등 응답 포함)의 설문조사를 하였음.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한국대학생봉사단>

(2) 조사방법 : 29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대학(원)생 1,332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2.69\%P$ >

(가) 성별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남	605	45.42%
여	721	54.13%
무응답	6	0.45%
계	1332	100.00%

(나) 성별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① 재학	1166	87.54%
② 휴학	70	5.26%
③ 졸업	24	1.80%
④ 대학원 재학	27	2.03%
⑤ 기타	6	0.45%
무응답	39	2.93%
계	1332	100.00%

(다) 연령별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21세이하	451	33.86%
21세초과~24세이하	515	38.66%
24세초과~27세이하	311	23.35%
27세초과	48	3.60%
무응답	7	0.53%
계	1332	100.00%

[설문참여 출신대학교]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대구한의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 서울여대 서원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조지타운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서대 한양대 홍익대 (45개 대학교)

Ⅱ. 주요 분석 |

1. 국회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49.02% 찬성

- 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며,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2%로, ‘반대하며, 정당이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응답(46.10%)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것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찬성하며,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야 한다.	653	49.02%
☐ 2. 반대하며, 정당이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	614	46.10%
☐ 3. 기타	63	4.73%
무응답	2	0.15%
계	1332	100.00%

- ② 국회의 청문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임의적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07%인 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게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47.82%로 조금 높게 나왔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응답은 5.56%였다.

2.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4.07%

- ①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41.37%, ‘조금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52.70%로 높게 나온 반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는 5.93%에 그쳐 청년대학생들 대부분은 선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가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551	41.37%
☐ 2. 조금은 영향을 줄 것이다.	702	52.70%
☐ 3.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79	5.93%
☐ 4. 기타	0	0.00%
무응답	0	0.00%
계	1332	100.00%

- ② “선거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었는 지”에 대해 ‘많

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3.51%,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는 51.50%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5.53%,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6.98%로 10명 중 3명 꼴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해 선거공보물도 신세대의 입맛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선관위의 선거공보물이 선거시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많이 도움이 되었다.	180	13.51%
☐ 2.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686	51.50%
☐ 3.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0	25.53%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3	6.98%
☐ 5. 기타	33	2.48%
무응답	0	0.00%
계	1332	100.00%

- ③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87.84%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1.41%가 나와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폭동 발생, 재선거 등 부정의혹이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14.86%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출범 2년 문재인 정부의 법·정치와 대북정책 등에 공과에 대해 의견 갈려

- ① “문재인 정부가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 ‘매우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11.79%,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56.23%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잘 지키지 않고 있다’ 17.4%, ‘매우 안 지키고 있다’ 5.86% 등 부정적인 응답도 23.28%나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매우 잘 지키고 있다.	157	11.79%
☐ 2.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	749	56.23%
☐ 3. 잘 지키지 않고 있다.	232	17.42%
☐ 4. 매우 안 지키고 있다.	78	5.86%
☐ 5. 기타	46	3.45%
무응답	70	5.26%
계	1332	100.00%

- ②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 의견은 43.69%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53.75%로 나와,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 에 대한 동의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동의한다)	582	43.69%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716	53.75%
무응답	34	2.55%
계	1332	100.00%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이 옳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3.12%로 동의하지 않는다(25.00%)보다 압도적이었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아무 걱정이 없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22.7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5.38%였다.

- ③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보의 철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되도록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3%로 과반을 조금 넘겼으나, ‘반대하며, 농민(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한다면 더욱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36.94%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등 성급한 보 철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의 기타 의견이 많이 나왔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유공자 아닌 가짜유공자가 많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가짜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8.80%로 조금 많이 나왔으며, ‘가짜뉴스이므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1.29%가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가짜유공자가 많다는 의혹에 대한 대처방안》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유공자 명단을 공개 해서 가짜를 처벌해야 한다.	650	48.80%
☐ 2. 가짜뉴스이므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550	41.29%
☐ 3. 기타	112	8.41%
무응답	20	1.50%
계	1332	100.00%

- ④ “정부의 https 접속차단정책의 악용가능성(인터넷 검열, 정부비판 차단, 통신자유 침해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25.15%), ‘약간 우려한다’ (46.47%)로 우려하는 응답이 71.62%로 높게 나왔으며, 반면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20.27%),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6.31%) 등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모두 26.58%였다.

《정부의 https 접속차단정책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매우 우려한다.	335	25.15%
☐ 2. 약간 우려한다.	619	46.47%
☐ 3.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270	20.27%
☐ 4.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84	6.31%
☐ 5. 기타	16	1.20%
무응답	8	0.60%
계	1332	100.00%

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과 관련해 ‘2017년 봄 대통령선거(5·9)에 드루킹 여론조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10.21%,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29.05%로 39.26%가 의혹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32.2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55%) 등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많았다. 또한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회피형 응답이 6.46%정도 나왔다.

《‘2017년 대선에 드루킹 여론조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한 동의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136	10.21%
☐ 2. 대체로 동의한다.	387	29.05%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431	32.36%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87	21.55%
☐ 5. 기타	86	6.46%
무응답	5	0.38%
계	1332	100.00%

4. 청년 대학생들의 법의식 -- 10억이면 1년 교도소 살이 가능 (52.70%)

①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실세는 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84.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13.44%에 불과했다.

이러한 의식을 나타내 듯 “법원과 검찰의 재판이나 수사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5.41%에 불과한 반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다’는 응답은 28.98%로 높게 나왔고,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는 응답이 62.99%로 대체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법원과 검찰의 재판이나 수사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72	5.41%
☐ 2.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	839	62.99%
☐ 3.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다.	386	28.98%
☐ 4. 잘 모르겠다.	29	2.18%
무응답	6	0.45%
계	1332	100.00%

- ②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2.7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40%로 의견이 갈렸으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50.23%가 ‘동의’하는 반면, 48.2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견은 48.0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98%로 역시 의견이 갈렸다.

‘10억을 준다면, 1년동안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견은 52.7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6.32%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57.36%가 동의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48.82%가 동의했다.

《10억을 준다면 1년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동의한다)	702	52.70%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617	46.32%
무응답	13	0.98%
계	1332	100.00%

5.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 로펌 등에서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 ‘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는 답변이 10명 중 2명 꼴(22.82%)로 나와

- ① “변호사실이나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내용증명이나 어떤 통지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통지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2명으로 4.65%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42명으로 18.17%로 나와 전체적으로 22.82%가 저작권 위반 협박편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통계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국민은 최소한 매년 150만 명~ 750만명으로 추정되어, 세계유례없는 저작권법을 개정해야한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 내용증명을 받았는 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2	4.6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242	18.17%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다.	1016	76.28%
☐ 4. 기타	11	0.83%
무응답	1	0.08%
계	1332	100.00%

- ②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검찰)가 나서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는 의견이 890명으로 66.82%를 차지하여 현행처럼 ‘검찰이(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상관없이) 직접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응답(30.9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안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는 등이 있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비친고죄 문제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890	66.82%
☐ 2. 검찰이(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상관없이) 직접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2	30.93%
☐ 3. 기타	27	2.03%
무응답	3	0.23%
계	1332	100.00%

6. 취업, 창업 등 장래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68.24%)

- ① “취업이나 창업 등 장래에 대해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응답은 20.35%에 불과한 반면, ‘정부 정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68.24%으로 나와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취업, 창업 등 장래에 대한 정부 정책 기대 여부》

내용	응답 인원(명)	응답비율 (%)	남학생		여학생	
☐ 1.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71	20.35%	140	23.14%	128	17.75%
☐ 2. 정부 정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909	68.24%	382	63.14%	526	72.95%
☐ 3. 정부정책과 내 삶은 관련이 없다.	92	6.91%	46	7.60%	45	6.24%
☐ 4. 기타	41	3.08%	18	2.98%	22	3.05%
무응답	19	1.43%	19	3.14%	0	0.00%
계	1332	100.00%	605	100.00%	721	100.00%

부정적인 응답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63.14%인 반면, 여학생은 72.95%로 여학생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등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높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762명으로 57.21%를 차지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724명, 전체응답자의 54.35%였다.

7.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이 약간 우세

- ①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소위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4.08%인 반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9.98%로 높게 나왔으며, ‘검찰에 대한 신뢰여부를 떠나 찬성한다’는 기타 의견도 나와 찬성하는 쪽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454	34.08%
☐ 2. 검찰을 믿을 수 없으므로 찬성한다.	799	59.98%
☐ 3. 기타	70	5.26%
무응답	9	0.68%
계	1332	100.00%

참고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66.02%가 찬성의견이어서 남학생의 52.73%보다 높게 나왔다.

- ②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소위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33%, ‘반대한다’는 응답(37.76%)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는 무응답층이 3.90%나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독립)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777	58.33%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503	37.76%
☐ 3. 기타	0	0.00%
무응답	52	3.90%
계	1332	100.00%

Ⅲ. 항목별 응답현황 |

■ 귀하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551	41.37%
☐ 2. 조금은 영향을 줄 것이다.	702	52.70%
☐ 3.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79	5.93%
☐ 4. 기타	0	0.00%
무응답	0	0.00%
계	1332	100.00%

■ 귀하는 과거 선관위의 선거 공보물을 받아 보셨을 것인데, 그 내용물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많이 도움이 되었다.	180	13.51%
☐ 2.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686	51.50%
☐ 3.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0	25.53%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3	6.98%
☐ 5. 기타	33	2.48%
무응답	0	0.00%
계	1332	100.00%

■ 귀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찬성하며,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야 한다.	653	49.02%
☐ 2. 반대하며, 정당이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	614	46.10%
☐ 3. 기타	63	4.73%
무응답	2	0.15%
계	1332	100.00%

■ 귀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의 임명을 할 수 있고, 또 임명강행하고 있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587	44.07%
☐ 2.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게 제도개선해야 한다.	637	47.82%
☐ 3.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야 한다.	74	5.56%
☐ 4. 기타	32	2.40%
무응답	2	0.15%
계	1332	100.00%

■ 귀하는 공직선거서 ‘사전투표제도’ (투표일 며칠 전에 선거구 아닌 곳에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유지해야 한다.	1170	87.84%
☐ 2. 투표함 보관 등 선거부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152	11.41%
☐ 3. 기타	6	0.45%
무응답	4	0.30%
계	1332	100.00%

■ 귀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등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했던 이라크 필리핀 콩고 등에서 개표조작사건(부정선거) 때문에 폭동까지 났는데, 한국에서 계속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당장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198	14.86%
☐ 2.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1054	79.13%
☐ 3. 기타	66	4.95%
무응답	14	1.05%
계	1332	100.00%

■ 귀하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알고 있다.	692	51.95%
☐ 2. 처음 들었다.	614	46.10%
☐ 3. 기타	24	1.80%
무응답	2	0.15%
계	1332	100.00%

■ 귀하는 취업이나 창업 등 장래에 대해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71	20.35%
☐ 2. 정부 정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909	68.24%
☐ 3. 정부정책과 내 삶은 관련이 없다.	92	6.91%
☐ 4. 기타	41	3.08%
무응답	19	1.43%
계	1332	100.00%

■ 최저임금제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소상공인 등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높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762	57.21%
☐ 2. 아니오	567	42.57%
무응답	3	0.23%
계	1332	100.00%

2)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839	62.99%
☐ 2. 아니오	488	36.64%
무응답	5	0.38%
계	1332	100.00%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724	54.35%
☐ 2. 아니오	599	44.97%
무응답	9	0.68%
계	1332	100.00%

■ 귀하는 4대강 보의 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찬성하며, 되도록 빨리 철거해야 한다.	701	52.63%
☐ 2. 반대하며, 농민(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한다면 더욱 <u>그대로 두어야 한다.</u>	492	36.94%
☐ 3. 기타	126	9.46%
무응답	13	0.98%
계	1332	100.00%

■ 귀하는 '2017년 봄 대통령선거(5·9)에 드루킹 여론조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136	10.21%
☐ 2. 대체로 동의한다.	387	29.05%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431	32.36%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87	21.55%
☐ 5. 기타	86	6.46%
무응답	5	0.38%
계	1332	100.00%

■ 귀하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유공자 아닌 가짜유공자가 많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유공자 명단을 공개 해서 가짜를 처벌해야 한다.	650	48.80%
☐ 2. 가짜뉴스이므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550	41.29%
☐ 3. 기타	112	8.41%
무응답	20	1.50%
계	1332	100.00%

■ 귀하는 문재인 정부가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매우 잘 지키고 있다.	157	11.79%
☐ 2.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	749	56.23%
☐ 3. 잘 지키지 않고 있다.	232	17.42%
☐ 4. 매우 안 지키고 있다.	78	5.86%
☐ 5. 기타	46	3.45%
무응답	70	5.26%
계	1332	100.00%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십니까.)

1) 유엔의 대북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이 옳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974	73.12%
☐ 2. 아니오	333	25.00%
무응답	25	1.88%
계	1332	100.00%

2) 주한 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아무 걱정이 없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303	22.75%
☐ 2. 아니오	1004	75.38%
무응답	25	1.88%
계	1332	100.00%

3)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582	43.69%
☐ 2. 아니오	716	53.75%
무응답	34	2.55%
계	1332	100.00%

■ 귀하는 정부의 https 접속차단정책의 악용가능성(인터넷 검열, 정부비판 차단, 통신자유 침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매우 우려한다.	335	25.15%
☐ 2. 약간 우려한다.	619	46.47%
☐ 3.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270	20.27%
☐ 4.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84	6.31%
☐ 5. 기타	16	1.20%
무응답	8	0.60%
계	1332	100.00%

■ 귀하는 변호사실이나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내 용증명이나 어떤 통지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통지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2	4.6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242	18.17%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다.	1016	76.28%
☐ 4. 기타	11	0.83%
무응답	1	0.08%
계	1332	100.00%

■ 귀하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검찰)가 나서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890	66.82%
☐ 2. 검찰이(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상관없이) 직접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2	30.93%
☐ 3. 기타	27	2.03%
무응답	3	0.23%
계	1332	100.00%

■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실세는 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1131	84.91%
☐ 2.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79	13.44%
☐ 3. 기타	19	1.43%
무응답	3	0.23%
계	1332	100.00%

■ 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재판이나 수사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72	5.41%
☐ 2.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	839	62.99%
☐ 3.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다.	386	28.98%
☐ 4. 잘 모르겠다.	29	2.18%
무응답	6	0.45%
계	1332	100.00%

■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702	52.70%
☐ 2. 아니오	618	46.40%
무응답	12	0.90%
계	1332	100.00%

2)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669	50.23%
☐ 2. 아니오	643	48.27%
무응답	20	1.50%
계	1332	100.00%

3)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640	48.05%
☐ 2. 아니오	679	50.98%
무응답	13	0.98%
계	1332	100.00%

4) 10억을 준다면, 1년동안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702	52.70%
☐ 2. 아니오	617	46.32%
무응답	13	0.98%
계	1332	100.00%

■ 귀하는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소위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454	34.08%
☐ 2. 검찰을 믿을 수 없으므로 찬성한다.	799	59.98%
☐ 3. 기타	70	5.26%
무응답	9	0.68%
계	1332	100.00%

■ 귀하는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위 수사권 조정문제)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777	58.33%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503	37.76%
☐ 3. 기타	0	0.00%
무응답	52	3.90%
계	1332	100.00%